

전남 e-모빌리티, 세계 3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영광대마산단서 정부 대표단 협약 사업모델 개발·시장 확산 등 협력 내년 K-모빌리티 해외실증사업도 "내수부족 해결 새로운 활로 기대"

전남지역 e-모빌리티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16일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지 찾은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과 양국의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e-모빌리티 협회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

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이륜차 시장으로 자동차보다 6배 많은 1억1000만 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정부 대표단에는 교통부 부국장, 발리 지방교통국장, 전기오토바이산업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전남지역 e-모빌리티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소형 e-모빌리티 성능 검증 및 평가·인증 협력 △소형 e-모빌리티 사업모델 개발 및 시장 확산 협력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3월 인도네시아에서 전남지역 기업과 함께 수출상담회인 '전남 모빌리티데이(DAY)'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발리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생산한 e-모빌리티를 현지에서 실증하는 '수출형 케이(K)-모빌리티 해외실증' 사업도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급속히 확대되는 동남아 소형 e-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 △중국 저가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e-모빌리티 공동생산 시설 구축 △동남아 시장에 맞춘 수출형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관련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은 큰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해 지역 한 기업은 베트남 HSC사와 810만 달러 수출 계약과 현지 조립공장 임대계약을 진행했다. 또 다른 기업은

필리핀에 매월 전기이륜차 1000대, 이(e)-지프니 500대를 양산하는 현지 조립공장을 설립하고 316만 달러 초도물량 납품을 시작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성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소형 e-모빌리티 시장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지역 기업에는 내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설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자치구와 특별감시반 구성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활동'을 벌인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17일간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7개반 14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

한다. 대상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670여개소로,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인근 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 환경오염 신고 창구(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설 연휴 후인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오숙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즉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김지사 "국가 정상 기능 위해 공무원 역할 충실"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16일 실국장 회의 석상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비극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공무원들이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손편지를 보니 태극기부대와 상환인식이 같은 것 같

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힘을 합치자"고 특별히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6일 서구가족센터에서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공모전에서 확정된 베트남, 중국, 러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 15세대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는 1인당 50만원씩 총 2600만원의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비 전액은 서구가너스가 후원한다. 김영배 기자

광주시, '경계선지능 청년' 사회참여 이끈다

청년재단과 협약...사회생활 증진 진로상담·직무훈련·일경험 지원

광주시가 청년재단과 손잡고 지역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다. 광주시와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과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의 경계에 위치한 인지능력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복지·고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움받지 못해 취업·자립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두 기관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일 경험을 제공하는 등 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광주형 지원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등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게 된다. 광주시는 청년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맞춤형 진로상담부터 직무훈련, 직무경험까지 제공하는 등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특히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업-유관기관 간 협력망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적성에 맞춰 다양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재단은 광주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청년재단과 협력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수행기관 모집

내달 5일까지 4개소...3월 통보 이동상담소·한국어 교육 운영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25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 전남도는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권역별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어·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전남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청은 2월5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

적, 교육장·상담실 등 시설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수행 기관을 확정해 3월 중도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광양 외국인 노동자센터,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 전남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순천로드월드비전, 4곳에서 수행, 3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올해는 새로 문을 연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고충 상담 서비스를 한다. 권역별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이민정책과(061-286-2572)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식량분야 직불금 5848억원 편성

확대 지원...전년비 721억 늘어 기후위기·청년농 육성 등 발굴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인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원 늘어난 5848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11억원

증액된 5015억원으로 편성,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이에 따라 1ha당 100만~205만원이었던 면적직불금도 136만~2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특히 논·밭 간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논에 비해 62~70% 수준이었던 비전흥지역 밭 지급단가도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수입 의존성이 높은 곡물 재배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도 545억원에서 806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깨'를 하계품목에 신규로(100만원/ha당) 추가하고,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밭은 1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또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 논물얇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면적 최소기준을 50ha에서 20ha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원에서 27억원으로 증액했다. 논물 관리를 통해 상시 담수에서 2주 이상 간단관개를 하면 온실가스가 ha당 5.79톤이 감축되고, 논물 얇게 걸러대기는 1.27톤이 감축된다. 오지현 기자